

과제 목표	■ 반부패 개혁을 위해 부패방지체계 강화,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 확대, 국민권익 보호,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강화 등 추진
2019년도 주요성과	■ 법정부적 부패방지시스템 마련으로 부패방지 체계화 • 대통령 주재 반부패 정책추진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*(19.6월, 11월), 「공공재정환수법」 제정**(19.4월)을 통한 보조금 등 공공재정 누수 방지 * 신종탈세 및 체납행위 근절 등 논의(제4차 회의), 전관특혜 근절방안 등 논의(제5차 회의) ** 각종 보조금, 보상금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시 부정이익 전액환수, 제재부가금 부과 등 •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*를 통한 반부패 정책 제안·점검·평가, 국민모니터단 운영 등으로 국민 참여 활성화 *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이행방안(19.4월), 지방의회의원 겸직 정보 투명성 강화(19.7월),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(19.10월), 아파트 선분양제도 공정성·투명성 강화(19.12월),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(19.12월) •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* 및 개선대책** 수립(19.2월)으로 채용비리 근절 * 조사 결과 : 채용비리 적발 182건(수사의뢰 36건, 징계요구 146건 등) ** 공통 징계양정기준 마련, 매년 전수조사 실시, 자의적 특채 규정 일괄정비 등 ■ 부패·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·보상 강화로 신고제도 활성화 •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개정(19.4월)으로 부패신고자 보호·보상 강화 * 보호대상 신고자의 범위 확대(국회·법원 증언, 수사기관 고소·고발 포함),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자 처벌수준 강화(과태료→징역, 벌금형),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 확대(2년→3년) •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번호인단 구성(19.7월) * 자문번호인단(50명) 운영으로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 지원 ■ 불공정 관행 등 생활적폐 근절로 '반칙과 특권없는 사회' 구현 • 학사비리 등 생애주기별 9대 생활적폐 해소를 위한 '생활적폐대책협의회' 운영(분기별 개최)으로 국민 삶과 직결된 부패현안 적극 대응 * (교육) 응시생과 특수관계인 입학사정관에게 회피의무 부과, 학생평가 비위 사학교원에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 적용(19.4월), 국·공립교원의 자녀와 동일학교 근무 금지(19.9월) * (갑질) 공공갑질 근절을 위한 '공무원징계령' 개정(19.4월),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을 위한 근로3법(근로기준법, 산업재해보상보호법, 산업안전보건법) 개정(19.7월) * (보조금) 부정수급액 647억원 환수,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 등 부정수급 근절대책 마련(19.10월) ■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•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토착비리 수사 * (5대 중대 부패범죄) 뇌물, 알선수재, 횡령, 배임 등, 630명 단속, 160명 구속(19.11월) * (토착비리) 지역토호, 공직자 등의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등, 296명 단속, 94명 구속(19.11월) * (사면제한)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·경제인·공직자,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제외(19.2월)

	< 정부 3년간 핵심성과 > •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범정부 반부패체계 구축 *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('17.9월)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협력 제도화,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('18.4월)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출범('18.3월) • 공익신고자 보호 체계 강화 및 생활적폐 근절 추진 *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('18.10월), 공익신고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(3개월→1년),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한도 상향(20억원→30억원)으로 신고자 보호 강화 * 출발선에서의 불평등(유치원 및 학사비리, 공공기관 채용비리), 우월적 지위 남용(공공분야 갑질),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(보조금 부정수급, 지역 토착비리, 탈세, 보험수급 비리, 재건축 재개발 비리, 안전분야 부패) 등 생활적폐 9개 과제 확정 및 개선대책 추진('18.12월~) • 국가청렴도 제고로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개선 * 부패인식지수(CPI, 국제투명성기구, '19.1월 발표) 57점(역대최고), 45위('17년 대비 6단계 ↑) * 국가경쟁력지수(부패부문, 국제경영개발대학원, '19.5월 발표) 4.3점, 30위('17년 대비 10단계 ↑) * 공공청렴지수(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, '19.10월 발표) 19위 ('17년 대비 5단계 ↑)
개선·보완 필요사항	•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등을 위한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필요(정무위 소위 계류) * 국민권익위원회 조직 재설계(국가청렴위원회 신설, 행정심판 분리 등) 및 기능 강화(부패신고 사실 확인을 위한 진술청취 및 의견·자료 제출 요구) 등에 관한 여야간 이견 • 공익법인의 투명성·공정성 강화를 위한 「공익법인법」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제출 필요 * 시민공익위원회의 소속 및 위상 등에 관한 관계기관간 이견 조정